

사회복지 주간 동향(23.12.26.~12.29.)

1. 용인시 정책 동향

1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구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환경을가꾸다와
취약가정 방역 지원 업무협약 체결**



- * 용인특례시 기흥구 구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정경아)는 19일 관내 방역업체인 (주)환경을 가꾸다(대표 이한)와 관내 저소득 취약 가정에 방역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 협약에 따라 (주)환경을 가꾸다는 앞으로 1년 동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선정한 저소득 취약계층 10가구에 월 1회 정기적으로 해충 방역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
 - 이한 (주) 환경을 가꾸다 대표는 “최근 다시 빈대가 발생했다는 뉴스들이 보도되면서 방역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취약 계층에게 이런 도움을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협약을 맺게 됐다”며 “작은 도움 이나마 드릴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함
 - 정경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적절한 시점에 큰 도움을 주신 이한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민관이 함께 어려운 이웃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함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구갈동 행정복지센터)

2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유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시설에 특별한 크리스마스 추억 선사



- * 용인특례시 처인구 유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해피 크리스마스’ 사업을 지난 19일 진행했다고 21일 밝힘
- 이 사업은 현대자동차 보정서부대리점 직원들이 모은 성금으로 진행,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유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현대자동차 보정서부대리점 봉사자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진행
 - 하루 동안 ‘산타’가 된 봉사자들은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와 반딧불이문화학교 주간보호사업 장애아동에게 겨울철 방한용품을 전달
 - 이준화 현대자동차 보정서부대리점 대표는 “아이들에게 특별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추억을 만들고자 봉사활동에 참여했다”며 “봉사자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 됐다”고 말함
 - 고상혁 유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아이들을 위해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신 유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과 봉사자분들께 감사하다”며 “더 많은 아동들이 꿈을 펼치고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함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유림동 행정복지센터)

3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죽전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름다운 성산교회를 복지협력기관으로 인증



- * 용인특례시 수지구 죽전2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순구)가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동 소재 아름다운 성산교회(담임목사 임성택)를 지역복지협력기관으로 인증하고 현판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힘
 - 동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1년 이상 5만원 이상의 금액을 정기후원하거나 100만원 이상 금액을 기부한 기관·단체를 지역복지협력기관으로 정함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약을 맺고 다양한 지원을 하는 단체도 포함
 - 아름다운 성산교회는 매년 바자회를 통해 마련한 수익금 전액을 지역 내 청소년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지역 아동들을 위한 어린이도서관을 설립해 운영
- 박순구 위원장은 “이웃을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한 아름다운 성산교회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더 많은 단체가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함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죽전2동 행정복지센터)

4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사랑은 추울 때 움직이는 것” 오늘도 36.5도 용인

[2023. 12. 25] 연말연시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따뜻한 시민의 ‘나눔특레시



※ 역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사진

* “사랑은 추울 때 움직이는 것” 이것이 용인특레시 연말연시 이웃돕기 릴레이인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를 표현하는 한마디가 아닐까 한다. 오늘도 36.5도 체온을 지닌 용인의 가슴이 뛰고 있다. 많은 시민과 단체들의 기부 열기가 그 온기를 유지하는 힘이다. 이번 한 주간 사랑의 열차에는 누가 탑승했을까?

- 용인특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난방유 기부

- 용인특레시청 직장운동경기부가 지난 15일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난방유 1000L를 기부
- 직장운동경기부 감독과 선수들은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난방유를 직접 이웃에게 전달, 연탄과 난방유를 이웃에게 나눠주는 선행은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이어지고 있음
- 직장운동경기부는 성품 나눔 이외에도 자신들이 가진 재능을 활용해 조정 체험교실, 볼링교실 등 종목별 봉사활동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음

- 소외된 이웃을 향한 특별한 선물

- 지난 20일 오후 3시 처인구 역북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된 A씨가 상담을 요청, 장애인인 A씨는 행정복지센터에 김치 지원 여부를 물었고 이같은 상황을 지켜보던 이웃 주민은 곧장 집에서 김치 한 포기를 행정복지센터 직원에게 “아까 김치 필요하신 할아버지 계셨죠? 집에서 가져왔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요”라며 전달함
- 역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랑이 담긴 김치와 함께 이웃돕기 물품 박스를 더해 21일 A씨의 집을 방문해 전달

- 기흥구 마북동에서도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모아짐
 - 마북동은 산타 모자 모양의 수세미 60개와 과자 60개를 ‘성심원’과 ‘생명의 집’에 전달
 - 이날 전달된 수세미는 마북동에 거주 중인 홀로 어르신들이 직접 만들었고, 어르신들이 직접 쓴 편지도 함께 포장됨
 - 이와 함께 기흥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됐던 ‘시들지 않는 꽃’ 작품 제작 수강생들은 직접 만든 크리스마스 장식품 38개를 지난 21일 처인구 남사읍에 있는 ‘선한사마리아원’에 후원
 - 어려운 가정 아이들의 학업을 위한 장학금 전달(지역의 미래 인재를 위한 장학금 전달)
 - 처인구 원삼면 주민장학회회는 지난 19일 지역 내 25명의 학생에게 장학금 전달, 올해 14회를 맞이한 장학금 전달식은 원삼면 주민장학회의 1구좌 갖기 운동으로 장학기금을 모음
 - 장학회원들은 매년 1만원 이상을 적립하고, 이 장학금은 연말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에게 전달, 지금까지 누적 장학금 전달 액수는 약 2억원에 달함
 - 박한국 원삼면 주민장학회 이사장은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시작한 행사가 올해도 변함없이 이어질 수 있어 기쁘다”며 “학생들에게 희망을 나눠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함
 - 이 밖에도 용인시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의 돕는 나눔의 손길이 이어짐
-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복지정책과 나눔복지팀, 체육진흥과 체육정책팀, 처인구/수지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 남사읍/모현읍/삼가동/양지면/백암면/원삼면/중앙동/역북동/서농동/신갈동/구성동/동백3동/동백1동/영덕1동/보정동/상갈동/마북동/상현1동/풍덕천1동/풍덕천2동/죽전1동/동천동 행정복지팀, 원삼면 총무팀)

2. 중앙정부 정책 동향

1 중앙정부 복지현안

내년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재정지원 2배로 확대

내년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재정지원 2배로 확대

지원대상 확대 위해 예산 확충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까지 지원



- * 12월 11일(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내년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하, '푸른씨앗')의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 푸른씨앗은 노후준비가 부족한 근로자가 많은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공적 퇴직연금제도로써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
 -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고자 할 때 장애요인 중 하나가 비용부담,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주는 매년 일정 금액의 적립금과 수수료를 금융기관에 납입해야 하기 때문
 - 하지만 푸른씨앗에 가입하면 이러한 부담을 덜 수 있음, 푸른씨앗은 사업주에게 “근로자 퇴직급여 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하고 운영 수수료도 전액 면제('23.4월부터 5년간)
 - 내년에는 푸른씨앗의 가입 문턱을 낮춰 더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 올해의 두 배가 넘는 재정지원 예산을 정부안에 반영해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할 방침(재정지원 예산: '23년 92억원 → '24년 정부안 192억원)
 - 먼저, 근로자지원금을 신설해 노후소득 마련에 힘을 보탬,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12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국가의 지원 범위를 근로자까지로 확대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근로자지원금은 사업주지원금과 “지원기간(3년) 및 금액(사용자 부담금의 10%)”이 동일
 - 근로자지원금은 '근로자의 적립금 추가납입'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요건(월 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30% 미만)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본인 명의의 가입자계정으로 지급
 - 이에 더해, 재정지원 대상도 확대, 올해까지는 월 평균보수가 242만원(최저임금의 120%)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재정지원 혜택을 제공하지만, 내년부터는 월 평균보수가 268만원(최저임금의 130%) 미만인 근로자까지로 혜택을 넓힐 계획

- * 한편, 푸른씨앗은 퇴직연금 도입을 어렵게 했던 ‘복잡한 도입절차’도 획기적으로 개선한 제도로써 퇴직연금규약을 작성, 신고할 필요 없이 근로복지공단과 표준계약 체결만으로 쉽고 빠르게 가입 가능
 - 이와 함께 제도 가입부터 부담금의 적립과 운용, 퇴직급여 지급까지 모든 절차를 전산화하여 이용도 편리함
 - 퇴직연금 정책의 장애요인: ①복잡한 도입절차(30.3%), ②사외적립 부담(21.8%), ③수수료 부담(15.1%) 順 <퇴직연금제도 인식조사(한국연금학회, '23.4월)>
 - 이날(12.11.) 이정식 장관은 소상공인연합회 본관에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와 ‘푸른씨앗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어서 소상공인 및 소속 근로자, 근로복지공단 직원을 만나 푸른씨앗의 도입·운영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발전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눔, 특히 간담회에서는 푸른씨앗에 가입한 중소기업 대표와 근로자가 푸른씨앗에 가입하게 된 배경과 장점 등에 대해 이야기해 눈길을 끌었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참조:고용노동부) 참조

2

중앙정부 복지현안

정부 내 저출산 위기상황 공유, 특단의 대책 발굴방향 논의

< 인구정책기획단 저출산·고령사회분과 점검회의 개최(12.20) >

- * 보건복지부는 12월 20일(수) 14시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공동 주재로 인구정책기획단 저출산·고령사회분과 회의를 개최함
 - 저출산·고령사회 운영위원회 산하 인구정책기획단은 정부 전체의 역량을 결집하여 인구정책을 기획하기 위해 구성된 범부처 협의체로 지난 6월 19일 발족
 - (공동단장) 보건복지부 제1차관, 기획재정부 제1차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 (구성) ▲총괄작업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국무총리실)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분과(보건복지부 주관) 아래 6개 작업반,
 - 인구구조 변화 대응 분과(기획재정부 주관) 아래 5개 작업반 운영
 -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의 저출산 상황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공유함, 또한 저출산 특단의 대책 발굴을 위해 전문가 연석 간담회, 청년가구 대상 시리즈 간담회(패밀리스토밍) 등 진행계획을 논의함

[저출산 대응 현장 소통계획(안)]

- ▶ (전문가) 5회 연석 간담회 추진
 - 인구·가족학 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언론·의료계 등 각계 전문가 섭외
 - * (계획(안)) ①각계 전문가 I (12.6일 조찬 既 실시) → ②각계 전문가 II (12.15일 조찬 예정) → ③언론사 논설위원 → ④기자 → ⑤의료계(산부인과, 소아과 등)
 - ▶ (대상자 : 패밀리스토밍(FamilyStorming)) 6회 연속 기획
 - 다양한 구성의 청년가구들과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저출산 현상의 해법 모색
 - * (계획(안)) ①둘이서 살아요(무자녀가구, 12.7일 既 실시) → ②아빠 육아 휴직자(라떼파파, 12.19일 既 실시) → ③혼자서 살아요(미혼가구) → ④셋이서 살아요(1자녀가구) → ⑤여럿이 살아요(다자녀가구) → ⑥새롭게 살아요(비혼가구)
- *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에서 저출산 대책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하고, 통계청에서는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구축 및 발표계획을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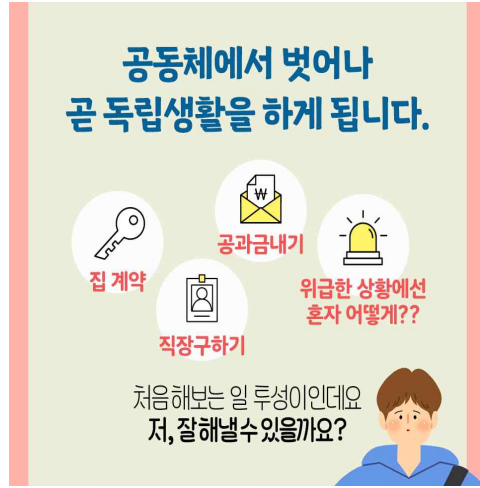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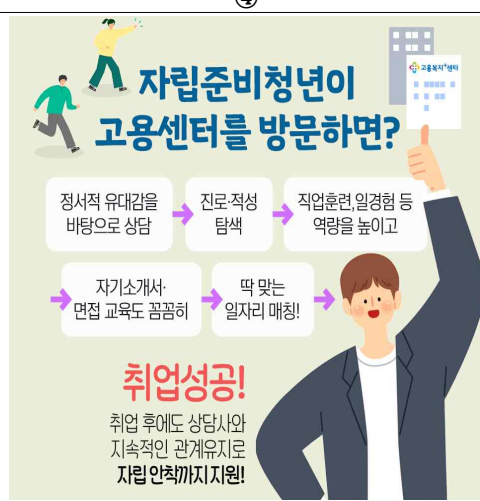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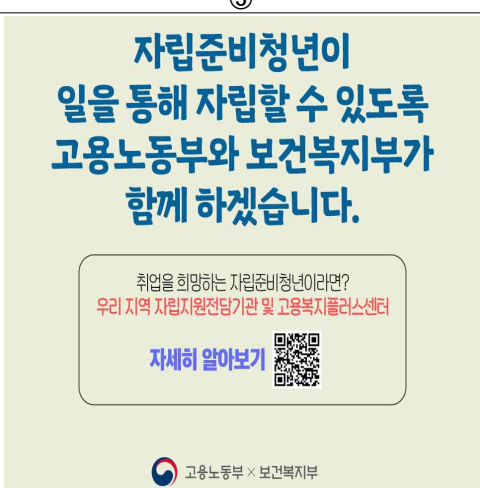
※ 보도자료 참조(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3 중앙정부 복지현안

자립준비청년의 일을 통한 자립,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합니다.

<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12.20.(수)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업을 원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함
 - 이번 협약은 보호 단계부터 보호종료 후까지 자립준비 시기별 맞춤형 취업 지원을 위해 두 부처가 상시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음
- * 보건복지부는 진로·적성 탐색과 취업지원이 필요한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을 발굴하여 고용노동부에 연계하고, 고용노동부는 찾아가는 진로교육,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참여자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 두 부처는 이를 위해 자립지원서비스와 취업지원서비스 간 연계 절차를 개선하고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한편, 자립지원전담기관 등 자립지원 유관기관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복지+센터가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매개할 계획
 - 예를 들어,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사례관리를 받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의 취업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대상자 동의를 받아 전담기관에서 고용센터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직접 의뢰할 수 있도록 할 예정

붙임		카드뉴스	
①			
②			
③			
④			
⑤			

※ 보도자료 참조(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권리과)

4 중앙정부 복지현안

체계적인 고령화 대응을 위한 '고령친화도시' 제도 도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 보건복지부는 12월 20일(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이번 법률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고령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지역을 '고령친화도시'로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 법에서 정하는 '고령친화도시'란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함
 - 앞으로 2년간의 제도 도입 준비과정을 거칠 예정이며, 이 기간에 세계보건기구(WHO)가 운영 중인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NAFCC)」, 80여 개 지자체가 시행 중인 관련 조례 등 국내·외 사례에 대한 분석을 거쳐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

※ 보도자료 참조(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

5 중앙정부 복지현안

자연장 범위 수목장에서 해양장까지 확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해양 등에 뿌리는 지속가능한 장사방식 제도화 >

- * 보건복지부는 12월 20일(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이번 법률개정에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해양 등에 뿌리는 장사방식을 제도화하여 자연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환경관리해역은 유골을 뿌리는 지역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동안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것만 가능하였으나 이번에 해양 등까지 확대, 그간 유골의 골분을 해양에 뿌리는 장사방식은 관습적으로 행해지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명확한 기준이 필요했음
 - 앞으로 1년간의 제도 도입 준비과정을 거칠 예정이며, 이 기간에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

※ 보도자료 참조(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6

중앙정부 복지현안

내년부터 경로당에 냉·난방비 19만 원 추가 지원

< 물가 인상 및 폭염·한파 등에 대비, 경로당 개소당 250만 원에서 269만 원으로 인상 >

- * 보건복지부는 12월 21일(목) 최근 물가 인상과 여름철 폭염, 겨울철 한파 등에 대비하여 한랭·온열질환에 취약한 어르신이 이용하는 전국 경로당(약 6.8만 개소)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힘
 - 경로당은 대부분 무더위·한파쉼터로 지정되어 어르신들의 여가생활뿐만 아니라, 무더위와 한파를 피해 안전하게 휴식을 할 수 있는 시설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난방비가 27억 원이 증액되어 2024년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단가를 개소당 연 250만 원에서 269만 원으로 인상하고,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 지원단가를 인상하여 지원할 계획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23년 : 715억 원 → '24년 800억 원, +85억 원)]

'24년 경로당 지원계획	냉 방	난 방	양 곡
	월 11.5만 원 → 16.5만 원(5만 원 인상) (7~8월)	월 37만 원 → 40만 원(3만 원 인상) (1~3월, 11~12월)	포당 52,340원 (연간 8포)

※ 보도자료 참조(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

7 중앙정부 복지현안

“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

<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1차 회의 및 관계기관 협의체 2차 회의 개최(12.22.) >

< 전국 12개 상담기관에서 위기임산부를 위한 심층상담 수행 >

- * 보건복지부는 12월 22일(금) 10시 아동권리보장원 회의실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1차 회의와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관계기관 협의체’ 2차 회의를 합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힘
- 정부는 2023년 6월 발생한 수원 아동 사망 사건 이후 미등록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을 추진해옴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개요]

○ (출생통보제) 시·읍·면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의료기관 출생 아동 정보를 바탕으로 부모의 출생신고 여부 확인 → ①신고 누락 시 최고* 및 ②필요 시 직권 출생기록

* 상대방에게 일정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

○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①원가정 양육 등 상담 → 상담 결과 불가피한 경우 보호출산 신청 시 ②의료기관에서 가명출산을 지원 → ③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하고 ④출생기록은 밀봉하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관리

- 이에 따라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여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23.6.30.)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23.10.6.)
- * 보건복지부는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의 시행(’24.7.19.)을 앞두고 시행착오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
- 또한, 인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여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회보장정보원, 아동권리보장원 등 유관기관이 함께 협업하여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관계기관 협의체’도 운영 중
· 추진단장은 이번 회의에서 ▲추진단 구성·운영 방안과 ▲기관별 업무 준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앞으로 추진단 회의와 협의체 회의를 각각 월 1회 이상 개최하여 제도 시행 준비사항을 단계별로 점검해나갈 계획
- * 한편, 지난 12월 21일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52억원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되어 확정됨

*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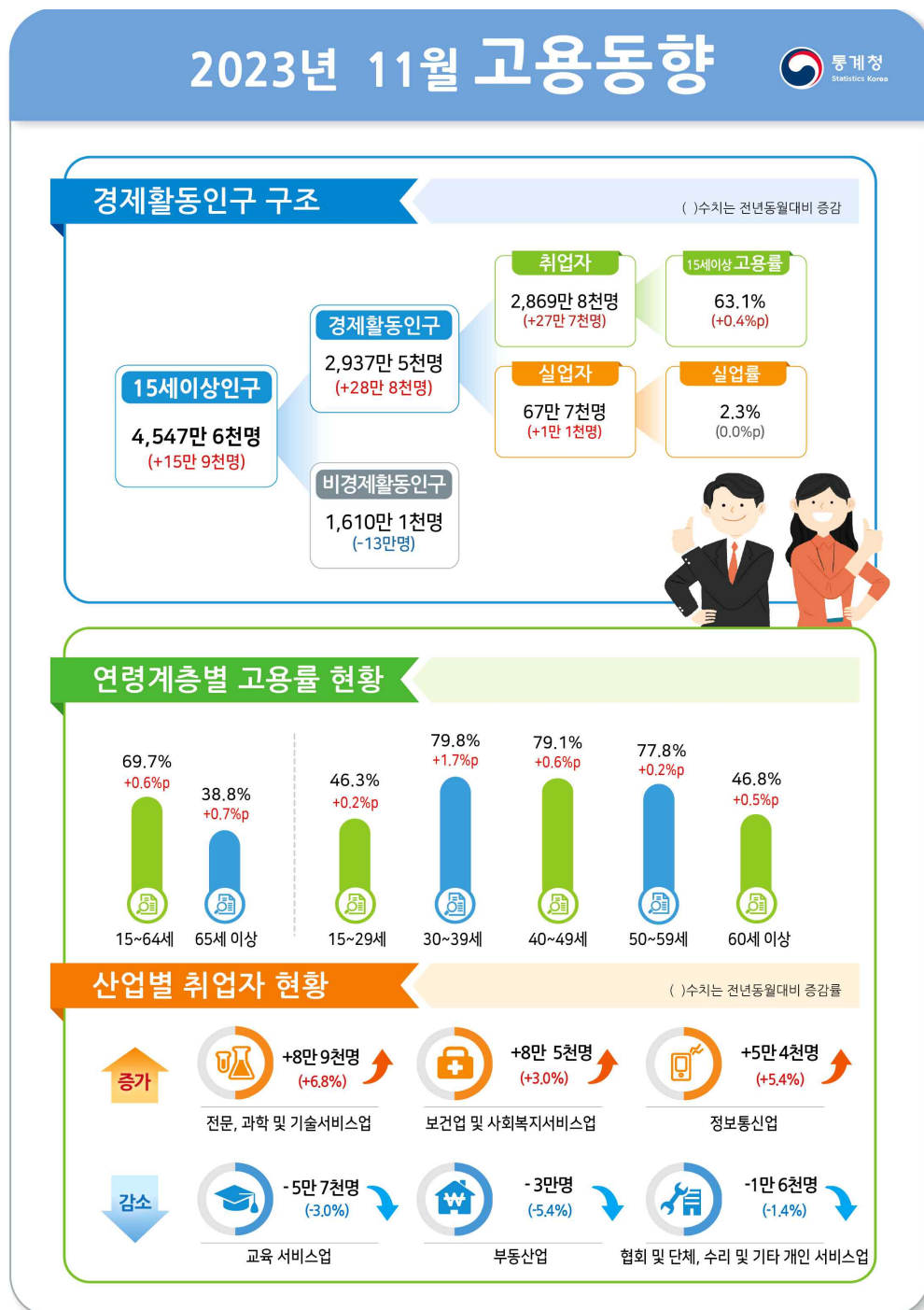
- (출생통보제) 의료기관의 출생 아동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시·읍·면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전자의무기록(EMR·OCS)을 활용하여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 이를 위해 전자의무기록 기능 개선 등을 통해 의료기관-심사평가원 간 시스템 연계를 추진
- (위기임산부 상담지원 및 보호출산) 위기임산부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각종 출산·양육 지원 서비스를 안내하고 연계해 주는 지역상담기관 12개소와 중앙상담지원기관을 운영
- 위기임산부가 지역상담기관에 연락하면 우선적으로 원가정 양육을 위해 양육·출산 지원 사업 안내 등 각종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받게 됨, 또한 상담에도 불구하고 보호출산을 선택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 검진 및 출산하고, 아이와 함께 1주일의 숙려기간을 보내게 됨
- (정보시스템 운영) 위기임산부 상담 전반과 아동의 보호 및 보호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보호출산 제도 운영 기반도 조성

※ 보도자료 참조(인구아동정책관 아동복지정책과)

3. 통계로 보는 복지

1 중앙 통계현안

2023 11월 고용동향



※ 자료 : 통계청 자료(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